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던졌다

고심 끝 '정면돌파' 선택
야당 반발·여론 등 부담
"원칙과 일관성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고심 끝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의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과 휴일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야당 반발, 여론 악화 등 각종 악재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먼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내년 예산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논두렁 시계' 처럼 조 장관 수사 내용이 시사각각 언론에 보도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로 인해 위기를 맞을 경우 검찰 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악재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명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나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김관수기자 cr-2002@srb.co.kr

조국 "견제·균형 원리 입각해 신속 추진"

취임사서 공수처 설치 등 언급
향후 검찰권 통제 가능성 시사

무·검찰 개혁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라며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짚었다.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사를 통해 "제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일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자신의 임명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았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가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저를 믿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 장관은 "법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지원을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법무, 범죄예방 정책, 인권, 교정 등의 비(非)검찰 업무를 거론하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임명'·'철회'...마지막까지 고민

두 가지 메시지 모두 준비
거취 문제 등 고심 거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임명'과 '지명 철회' 메시지를 모두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6명의 신임 장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 임명과 지명 철회의 2가지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8일 밤부터 9일 아침까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명 쪽으로 결정을 내린 뒤 밤 사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여러차례 메시지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참모들은 9일 오전 대통령과 수석들의 티타임때 조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오전 티타임과 이어진 실무 회의에서 발표 시간과 메시지, 발표 형식이 정해졌다. 오전 11시30분 고민정 대변인이 신임 장관·위원장 임명 제가를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하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

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강기정 정부수석은 발표 전 국회로 이동해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들에게 이번 임명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대풍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청와대로 돌아와 오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시점이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부수석 등 참모들에게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양보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 나갑시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외 회원기업 일동